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1. 30.(목) 06:00,
(지면) 2023. 11. 30.(목) 석간

배포 2023. 11. 29.(수) 14:00

“조개 껍데기의 변신은 계속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30일(목)부터 2024년 1월 10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였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하였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1월 10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

-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전화: 044-200-5634, 팩스: 044-861-9436, 이메일: ninesuns@korea.kr)
-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강미숙 (044-200-563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5633)



참 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정·시행 중(’21.7 공포, ’22.7. 시행)

* (적용대상)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의 껍데기(시행령 제2조)

-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 지난 1년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주요 개정사항

- 현장과 지자체 대상 하위법령 개정수요 확인 결과 총 17건 중 4건의 즉시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23.9)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용	▶(현 황)	유해화학물질 사용 불가 확일적인 금지 규정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불가 * 굴 껍데기와 염산을 활용한 제설제 등	시 행 령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 수산부산물 중간처리 과정에 유해화학 물질사용 허용
	▶(문제점)			
운반업 허가요건 현실화	▶(현 황)	수산부산물 수집업과 운반업 모두에게 보관시설 구비 의무화	시 행 령	운반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 의무 면제
	▶(문제점)	운반장비 외 불필요한 보관 시설까지 구매·임대 중		
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완화	▶(현 황)	환경기능사, 화공산업기사 등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고용	시 행 령	영세업체에 한해 「폐기물관리법」 상 기술요원* 배치 허용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
	▶(문제점)	영세 중간처리 업체 인건비 부담 과중화		
재활용 유형 확대	▶(현 황)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중	시 행 규 칙	복토재, 양빈재 등 상용화가 가능한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재활용 유형 확대
	▶(문제점)	재활용 유형이 19개에 불과 하여 활용폭이 협소 *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유형은 41개		